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강신구 | 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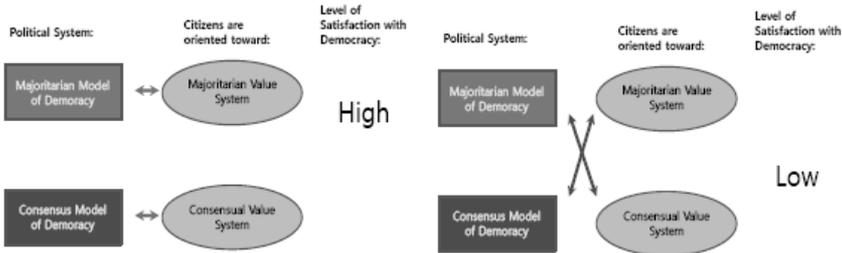
| 국문요약 |

이 글은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만족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두 개의 경험분석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가치관의 상(像)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보다 합의제적인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 거주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 수록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이 강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경험분석의 독립변수가 이론적 가설의 다수제적 가치체계와 합의제적 가치체계의 차이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물음이지만, 경험분석의 결과는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이 시민의 민주주의 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 조응, 민주주의 만족감

I. 서론

이 글은 강신구(2012)의 연구에서 제기했던 이론적 가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2012년에 발표된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 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행의 민주주의 체제를 다수제 민주주의 모형(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과 합의제 민주주의 모형(consensus model of democracy)으로 구분한 레이파르트(Lijphart 1999; 2012)의 유형론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제도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향(orientation) 또한 다수제적인 가치체계(value system)와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양자 - 제도와 가치체계 - 의 관계가 조응을 형성할 때, 시민들의 정치체제, 즉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satisfaction with democracy)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즉,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는 다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만족감을 보이며,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는 역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이론적 가설이 예상하는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부조응과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 조응

(나) 부조응

〈그림1〉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과 민주주의 만족감: 이론적 가설

그의 연구(2012)는 위와 같은 이론적 가설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경험적 검증에 시도하였다. 즉, 2011년에 한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검증이 여전히 탐색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검증이 다수제 민주주의 모형인 한국의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론적 가설이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모두를 대상으로 체제와 시민사회의 가치정향이 조응을 이룰 때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음에 비교하여, 검증은 다수제 민주주의 모형인 한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한 것이었다. 온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모형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지 않

은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높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 연구가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이 연구는 2016년에 실시된 제8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강신구(2012)에서 제기된 이론적 가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8차 유럽사회조사자료는 유럽 23개 국, 44,387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포함된 23개 국 중에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의 7개국을 제외한 16개의 국가들은 이미 레이파트에 의해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특히 이들 16개 국가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핀란드와 같이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은 물론, 영국, 프랑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8차 유럽사회조사자료는 체제와 가치체계의 조응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을 온전히 검증하기에 필수적인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에 대한 변이(variation)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사회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실시된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보완적으로 시도한 이유는 우선 앞서의 연구(강신구 2012)가 분석하였던 자료보다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것과 함께, 독립변인으로서 시민의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변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강신구의 연구(2012)가 자신의 연구목적에 맞게 특화된 설문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측정할 수 있었던 반면, 2016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지에는 그러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016년의 설문은 대신에 기존 사회의 질서와 전통,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변화에 저항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의미하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하상응 이보미 2017; Altemeyer 1996)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설문에 포함된 개인의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들이 시민의 다수제-합의제 가치체계를 온전히 표현해 내지는 못할지라도, 일정한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항들을 사용하여 개인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맺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2016년 자료를 통한 검증은 다른 방식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된 독립변수를 활용한 일종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강신구의 연구(2012)를 이론적 배경과 함께 그 결과와 한계를 간략히 되짚어보고, 이후에는 제8차 유럽사회조사자료와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II.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이론적 배경과 일차적 검증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제도 혹은 제도의 총체로서의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 조응(congruence)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치학의 연구전통의 하나이다(Dalton and Shin 2006; Eckstein 1966, 1998). 시민들의 가치체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정치문화론(political culture theory)으로 분류되는 이들 설명들의 핵심은 안정적인 정치체제는 그에 상응하는(congruent) 문화와 제도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안정적인 권위주의는 국가권력에 순응적인 시민을 전제로 하고,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관용적이며, 참여적인 규범을 존

중하고, 신뢰도가 높은 시민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Eckstein 1966, 1998; Almond and Verba 1963; Putnam 1993 등). 그러나 제도와 시민사회 가치체계의 조응을 강조해온 이제까지의 정치문화론의 논의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의 비교에만 치중해 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신구 2012, 45). 즉,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하기에 서로 다른 제도적 조합의 모습을 가지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유형론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레이파트는 그의 연구의 기준점이 되는 1996년에 19년 이상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던 36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10개의 제도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결과,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집행부-정당 차원’(executive-parties dimension)과 ‘연방적-단방적 차원’(federal-unitary dimension), 두 개의 차원을 축으로 하는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의 개념도 상에 위치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Lijphart 1999, 248. <그림 14.1>).¹⁾ 10개의 제도변수를 통해서 이처럼 단순화된 2차원의 개념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레이파트는 다수제, 합의제라는 두 개의 민주주의의 모형이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과연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누가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누구의 이해를 만족시켜야 하는가?’라는 매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여러 수준에 걸친 다양한 제도적 조합을 발전시켜 온 결과로 설명한다(Lijphart 1999, 1장). 즉, 다수제 민주주의는 이 질문의 ‘누구’에 대하여 ‘인민의 과반수’(the majority of the people)라는 답을 가지고, 이를 보다 효과적

1) 10개의 제도변수는 ①유효원내정당수, ②민주주의 지속기간 중 최소승리-일당내각의 비율, ③정부의 평균 지속기간으로 측정되는 집행부 지배, ④선거의 불비례성, ⑤이익집단 다원주의, ⑥연방제의 강도, ⑦양원제, ⑧헌법개정 경직성, ⑨사법적 검토, ⑩중앙은행의 독립성이다. 10개의 제도변수에 대한 측정과 관련하여 요약된 내용은 강신구(2012)의 <표1>, <표2> 참조(48-49).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개념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차원은 10개의 제도변수를 측정된 결과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 얻어진다.

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측면들이 설계되고 결합되어 발전한 모형이며, 합의제 민주주의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인민’(as many people as possible)이라는 답을 바탕으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조합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Lijphart 1999, 2).

그러나 레이파트는 민주주의의 유형(patterns of democracy)을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두 유형의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다. 즉,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실업률·노동쟁의율·재정적자도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 그리고 투표율·여성대표율·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정부와 유권자의 거리 등과 같은 소위 민주주의의 ‘질’(quality)을 보여주는 지표를 대상으로 두 유형의 우열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 합의제 민주주의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에 비해서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민주적 개혁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한다(Lijphart 1999, 302).

하지만 이렇게 합의제 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우위를 말하는 레이파트의 주장과 권고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congruence)을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단 비교의 대상이 되는 36개의 국가가 -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되건, 합의제 민주주의로 결국에는 분류되건 간에 - 모두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들 중에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해 올 수 있었을까?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해서 영국과 같은 다수제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합의제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레이파트의 주장과 권고는 제도와 시민사회 가치체계 사이의 선택적 관계를 간과한 제도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에 대한 이론적 가설(강신구 2012)은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두 개의 연구전통을 결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정치문화론적인 입장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며,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레이파트의 논의²⁾는 이들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이 각자의 민주주의적 원칙(principle)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이러한 원칙이 시민사회의 가치체계 속에 어떻게, 어느 정도나 수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두 입장의 결합을 통해서 앞서의 <그림1>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론적 가설이 제기된 것이다.³⁾

강신구(2012)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한국 사회의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화면접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그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림2>). 이 중에서 처음의 두 문항은 시민들의 다수제적·합의제적 가치체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문이다.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정부는 누구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민과반수’라는 답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①의 답을 선택했으리라 기대한 것이고, 같은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인민’을 선택한 사람은 ②의 답을 선택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2) 그러나 레이파트의 유형론은 그의 새로운 발견 혹은 주장이라기보다는 오랜 정치적 전통 속에서 발전되어 온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이파트(1999, 5-6), 강신구(2012, 41, 주2) 참조.

3) 종속변수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을 제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운영과 유지가 시민들이 그 민주정치의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큰 만족감을 느끼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여러 정치학의 문헌에 따른 것이다.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 67), 콘버그와 클라크(Kornberg and Clarke 1994) 등 참조.

〈표1〉 문3, 문12, 문21의 응답 분포

		민주주의의 위협?(문12)		계
		① 무책임한 비판	② 독선적 국정운영	
민주적 대안?(문3)	다수제적 대안 (① 가)	0.564* (0.042) (140)	0.294 (0.030) (238)	0.394 (0.025) (378)
	합의제적 대안 (② 나)	0.419 (0.040) (155)	0.245 (0.025) (302)	0.304 (0.022) (457)
	계	0.488 (0.029) (295)	0.267 (0.019) (540)	0.345 (0.016) (835)

주: * 셀 안의 수는 민주주의의 운영에 만족감을 표한 응답자(문21에 대하여 ①, ②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density), 괄호 안은 표준오차와 수(n)

〈표2〉 한국인의 민주정치 만족감 결정요인 분석: 프로빗 모형

	강신구(2012) <표5>	새로운 분석
합의제적 대안 (문3=②)	-0.210** (0.097)	
독선적 국정운영이 민주주의의 위협 (문12=②)	-0.549*** (0.101)	
다수제적 가치(문3①*문12①)		0.545*** (0.129)
합의제적 가치(문3②*문12②)		-0.255** (0.104)
N	783	783
Log-likelihood	-461.77	-523.64

주: 분석에는 그 외, 여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집단,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위치(상/중/하), 가계소득수준, 정치적 관심도의 변인들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음. 셀 안의 수는 추정회귀계수, (표준오차). **p<0.05, ***p<0.001

표에 제시된 결과는 이론적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을 레이파트가 측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제-합의제 지수를 측정했을 때, 한국의 지수값

(1.28)은 영국(1.39)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수준의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⁵⁾ 그러하기에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다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공적결정이 이른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방식에 대해서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들보다 높은 만족감을 표현할 것이라고 이론적 가설은 예상했던 것이고, <표1>과 <표2>에 나타난 결과는 이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이다.⁶⁾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검증은 반쪽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즉,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검증이기 때문이다. 이론에 대한 온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으로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들이 다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제8차 유럽사회조사자료에 주목한 이유이다.

5) 집행부-정당 차원에 한정된 것이다. 수치는 높을수록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레이파트의 초판(Lijphart 199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2년에 출판된 개정판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측정치는 개정판에 제시된 결과(1.29)와 매우 근사하다(Lijphart 2012, 305).

6) <표2>에서 새로운 분석은 독립변수를 다른 방식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기존의 연구(강신구 2012)에서 <그림2>에 제시된 문항 3번과 12번,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것과 비교하여 새로운 분석에서는 두 개의 문항 모두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다수제적인 대안을 선택한 응답자를 다수제적인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 모두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합의제적인 대안을 선택한 응답자를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포함한 것이다.

III. 제8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2016년 실시) 자료를 통한 검증

제8차 유럽사회조사자료는 2016년 총 23개 유럽국가의 시민 44,3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동유럽 7개국을 제외한 16개 국가는 이미 레이파트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분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다.⁷⁾ 그러하기에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의 검증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 검증에 활용되는 종속변수는 기존의 연구(강신구 2012)와 동일하게 민주주의 만족감으로 구성되었다. 제8차 유럽사회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께서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민주주의 만족감을 측정하는 표준적인(standardized)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의 독립변수인 시민의 다수제적·합의제적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문항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차 유럽사회조사는 시민들의 가치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섹션(H)을 구

7) 이들 16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0.26), 벨기에(-1.42), 스위스(-1.87), 독일(-0.23), 스페인(0.59), 핀란드(-1.66), 프랑스(0.93), 영국(1.39), 아일랜드(-0.12), 이스라엘(-1.27), 아이슬란드(-0.66), 이탈리아(-1.16), 네덜란드(-1.16), 노르웨이(-0.92), 포르투갈(-0.36), 스웨덴(-1.04). 괄호 안의 수는 레이파트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지수로서 큰 수일수록 다수제적인 속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Lijphart 1999 및 강신구 2012).

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이제부터 저[조사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략히 묘사할 것입니다. 각각의 묘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당신과 얼마나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제시된 카드를 선택해서 알려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고 “그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가치관의 상(像, image)을 제시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수제적·합의제적 가치체계를 측정하는 일종의 대체 변인(proxy variable)을 구성하였다. ‘인민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 정부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인민의 과반수’라는 다수제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가능한 많은 인민’이라는 합의제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에서 배제되는 (패자의) 입장이 보다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포용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의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묘사된 인물의 상을 자신과 유사한 인물로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 다음의 <그림3>은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문항과 선택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성된 합의제적 가치 변수의 조작화를 보여주고 있다.⁹⁾

-
- 8) 레이파트 역시 다수제 민주주의의 개념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매우 밀접히 연결된 차이점은 다수제 민주주의는 배제적(exclusive)·경쟁적(competitive)·적대적(adversarial)인 반면에, 합의제 모형은 포용성(inclusiveness)·협상(bargaining)·타협(compromise)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인다(Lijphart 1999, 2)
- 9) 이와 같은 조작화의 특징은 강신구의 연구(2012)가 개인의 가치체계를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명목변수로 측정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조작화는 개인이 합의제적 가치에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그 강도를 서열변수(ordinal variable)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1. Now I will briefly describe some people. Please listen to each description and tell me how much each person is or is not like you. Use this card for your answer.								
	Very much like me	Like me	some what like me	A little like me	Not like me	Not like me at all	Refusal	DK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C. <i>He thinks it is important that every person in the world should be treated equally. He believes everyone should have equal opportunities in life.</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 ~ U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Coding: 합의제적 가치	3		2		1		결측	

<그림3> 경험적 검증의 독립변수와 조작화: 합의제적 가치

이와 같은 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체계의 특성, 즉 다수제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만큼 잘 반영해내고 있는지, 즉 변수의 타당도(Validity)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조작화의 방식만을 가지고 판단해내는 것(액면 타당도, face validity)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6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소수(여섯 개)의 제한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서의 민주주의 만족감과 관련하여 기대한 것과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즉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갖는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3>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⁰⁾

10) 타당도 및 타당도 검증의 방법 혹은 접근법으로서 액면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와 관련해서는 폴락(Pollock 2003, 16) 참조.

〈표3〉 합의제적 가치와 민주주의 만족감: 6개 국가에 대한 예비적 분석

Majority score: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1.39	0.93	0.59	-1.04	-1.42	-1.66
합의제적 가치	①	5.28 (83)	3.87 (54)	3.74 (27)	5.17 (30)	4.97 (29)	4.62 (63)
	②	5.57 (457)	4.22 (484)	4.54 (173)	5.82 (285)	5.33 (413)	6.08 (448)
	③	5.29 (1342)	4.27 (1488)	4.44 (1678)	6.61 (1183)	5.52 (1309)	6.37 (1364)
	계	5.35 (1882)	4.25 (2026)	4.44 (1878)	6.43 (1498)	5.47 (1751)	6.24 (1875)
③ - ①의 값		0.01	0.4	0.7	1.44	0.55	1.75

주: 셀 안의 수는 민주주의 만족감의 평균값(mean). 괄호 안은 응답자 수(n)

표는 매우 다수제적인 국가(영국, 다수제지수=1.39)부터 매우 합의제적인 국가(핀란드, 다수제지수=-1.66) 까지를 포함하는 6개 국가에 대해서 각각, 앞의 <그림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제적 가치를 측정하였을 때, 이 변수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들의 민주정치 체제에 대해서 표하는 만족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기대했던 바를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새롭게 구성된 합의제적 가치라는 변수가 애초 측정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온전히 - 혹은 일부나마 - 측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표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본 연구가 변수의 구성 타당도에 대한 예비적 조사로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각각의 국가별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 동의를 표한 집단(합의제적 가치가 ③으로 측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 혹은 보다 소극적인 동의를 표한 집단(합의제적 가치가 ①, ②로 측정된 사람들)이 보이는 만족감의 차이이다. 보다 다수제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일수록 후자를 선택한 집단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전자를 선택한 집단의 만족감이 낮게 나타남으로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보다 합의제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일수록 그 격차가 커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①과 ③의 값을 갖는 시민들의 평균 만족감의 차이가 국가가 보이는 합의제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이 커질수록 커지는 양상을 기대한 것이다. 그리고 표의 결과는 이러한 기대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이 다수제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서는 평균 만족감의 차이가 +0.01, +0.4, +0.7로 나타나는 반면에,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와 같이 합의제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서는 그 차이가 +1.44, +0.55, +1.75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합의제적 가치와 민주주의 만족감에 대한 양변인 분석으로 후자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시 동일한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정경제 만족도, 국가경제 만족도, 정치적 관심 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합의제적 가치가 민주주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¹¹⁾ 다음의 <표4>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1) 통제변인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표의 주 참조.

〈표4〉 합의제적 가치와 민주주의 만족감: 6개 국가에 대한 다변인 분석

Lijphart's majority score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1.39	0.93	0.59	-1.04	-1.42	-1.66
여성	-0.020 (0.107)	0.065 (0.099)	-0.050 (0.117)	0.148 (0.101)	0.072 (0.090)	-0.151 (0.088)
연령	-0.001 (0.003)	0.004 (0.003)	0.015*** (0.004)	-0.004 (0.003)	-0.005 (0.003)	-0.002 (0.002)
교육수준	0.028 (0.029)	0.109*** (0.030)	-0.014 (0.034)	0.073* (0.031)	0.071** (0.025)	0.076** (0.025)
가계소득	0.029 (0.023)	0.018 (0.022)	0.010 (0.029)	0.022 (0.021)	-0.039 (0.023)	-0.003 (0.020)
가정경제 만족도	0.038 (0.084)	0.170* (0.077)	-0.136 (0.084)	0.036 (0.087)	0.153* (0.070)	0.371*** (0.078)
국가경제 만족도	0.582*** (0.027)	0.621 (0.027)	0.534*** (0.028)	0.538*** (0.026)	0.540*** (0.024)	0.461*** (0.022)
정치적 관심	0.231*** (0.063)	0.171** (0.054)	0.133* (0.062)	0.126 (0.068)	0.230*** (0.053)	0.305*** (0.058)
합의제적 가치	-0.111 (0.098)	0.178 (0.096)	0.349* (0.171)	0.387*** (0.110)	0.313*** (0.093)	0.391*** (0.082)
상수	1.803*** (0.415)	-0.035 (0.378)	0.839 (0.572)	1.316** (0.474)	0.879* (0.360)	0.620 (0.341)
N	1,553	1,840	1,441	1,367	1,648	1,785
R2	0.2610	0.2866	0.2283	0.2922	0.2923	0.2773
조정된 R2	0.2572	0.2835	0.2240	0.2880	0.2888	0.2740

주: 11점 척도로 측정된 민주주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 셀 안의 수는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괄호 안). 교육수준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가계소득은 10점 척도,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11점 척도, 정치적 관심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모두 높은 값일수록 해당 변인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p<0.05, **p<0.01, ***p<0.001.

표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합의제적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스페인의 경우는 비록 계수 자체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모두에서는 합의제적 가치에 동조하는 양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스로의 체제에서 민주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보다 큰 만족감을 표하는 양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p < 0.001$)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일부의 독자들은 왜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제적 가치의 영향력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적 가설이 다수제 국가에서는 다수제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합의제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합의제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들일수록 만족감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비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가 이론적 가설이 상정하고 있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차이를 온전히 구별해낼 수 있는 변수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체변인(proxy variable)으로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사실 이 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평등’의 개념과 가치는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의 구별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측정의 척도상에 있는 중간값(②)이 다수제 민주주의의 가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선택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¹²⁾ 다만 본 연구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가치체계에 보다 큰 동조를 보이는 유권자일수록 척도 상에서 보다 큰 값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고, 이러한 제한적 기대 속에서 변수가 이론적 가설 속에서 기대했던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변수의 구성타당도

12) 이런 점에서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합의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편향적(biased)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의 표에서 나와 있듯이 대체적으로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상 선택된 6개 국가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과 민주주의 만족감에 대한 이론적 가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분석이 가능한 16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론적 가설의 검증과 관련한 국가 간의 차이, 즉,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서 갖는 만족감이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의 합의적인 성격에 의해서 달라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엄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인상(impression)에 기초한 답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분석은 여전히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8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레이파트에 의한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의 측정값이 있는 16개 전체 국가에 대한 분석(pooled analyses)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와 같은 종합분석의 주된 독립변인과 그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밝힌다. 분석에는 우선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레이파트의 다수제 지수값(Lijphart's majority score)의 부호를 반대로 한, **합의제 정치체제**라는 변수와,¹³⁾ 또한 이렇게 새로이 구성된 변수와 앞서의 합의제적 가치 변수를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으로 결합한 **합의제 정치체제*합의제적 가치** 변수가 구성되어 포함되었으며, 이 후자의 변수가 본 연구의 경험적 검증이 주목하는 주된 독립변인이다. 이 변수와 관련하여 이론적 가설은 양(+)¹³⁾의 값을 갖는 것을 기대한다. 즉, 같은 강도의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일지라도 그 시민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보다 합의제적인 속성을 가질수록, 그 시민은 자신의 체제 속에서 민주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지게

13) 그러하기에 이 값이 커질수록 민주주의 체제의 합의적인 속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측정값과 관련해서는 앞의 주8) 참조.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합의제 정치체제의 값은 또한 음(-)의 값(다수제 민주주의)을 가질 수 있기에, 이는 합의제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정도가 큰 시민은 만약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그 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5>는 이러한 이론적 기대를 갖고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5> 합의제적 가치와 민주주의 만족감: 16개 국가에 대한 분석

(Pooled Analyses)

	Model 1	Model 2	Model 3
여성	0.054* (0.026)	0.058* (0.026)	0.057* (0.026)
연령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교육수준	0.046*** (0.008)	0.043*** (0.008)	0.043*** (0.008)
가계소득	0.013* (0.006)	0.010 (0.006)	0.010 (0.006)
가정경제 만족도	0.138*** (0.019)	0.155*** (0.019)	0.154*** (0.019)
국가경제 만족도	0.561*** (0.006)	0.544*** (0.006)	0.543*** (0.006)
정치적 관심	0.140*** (0.015)	0.145*** (0.015)	0.145*** (0.015)
합의제적 가치	0.142*** (0.025)	0.147*** (0.025)	0.110*** (0.029)
합의제 정치체제		0.191*** (0.014)	0.011 (0.075)
합의제 정치체제*합의제적 가치			0.066** (0.022)
상수	1.228*** (0.097)	1.156*** (0.096)	1.260*** (0.105)
N	24,497	24,497	24,497
R2	0.3264	0.3312	0.3314
조정된 R2	0.3262	0.3310	0.3311

주: 11점 척도로 측정된 민주주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 국가별 더미는 합의제 정치체제 변수가 국가별로 고정된 값을 갖고 있기에 포함되지 않음. 셀 안의 수는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괄호 안).

*p<0.05, **p<0.01, ***p<0.001.

분석에는 앞서의 예비분석(<표4>)에 활용되었던 통제변인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서 삼단계로 이루어졌다. 즉, 합의제적 가치 변수만 포함한 모형(Model 1)으로부

더 합의제 정치체제(Model 2), 합의제 정치체제와 합의제적 가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Model 3)으로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를 덧붙여나간 것이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고 합의제 정치체제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Model 2)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표는 이 모형에서 합의제 정치체제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결과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합의제 정치체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지 않은, 다수제 정치체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레이파트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더 친절한’(kinder, gentler) 정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주장을 밝혔을 때 제시한 근거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Model 3)의 결과는 이와는 다른 맥락과 인과관계의 기제(causal mechanism)를 시사하고 있다.

즉, 합의제 정치체제의 시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만족감을 보이는 것이 합의제 정치체제 자체의 독립적이고 특수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Model 3에서 합의제 정치체제 변수의 추정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체제 속에서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 결과는 같은 강도의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도 체제의 다수제적·합의제적 속성에 따라 체제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음의 값(-)을 갖는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만족감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체제와 가치체계의 조응관계에 의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IV.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결과분석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에 대한 이론적 가설의 검증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강신구 2012)에서 미진한 채 남겨놓았던 경험적 분석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가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 온 한국에서 다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지 않은 - 합의제적 -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라면, 다수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의 충분한 변이(variation)를 확보하고 있는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이에 대한 보다 낮은 동조의 모습을 보이는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큰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국의 사례로 돌아와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해 2016년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통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2016년 조사자료에 대한 검증은 앞서의 조사보다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독립변인의 조작화에 있어서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일종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2016년 조사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응답자가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와 함께, ‘매우 자랑스럽다,’ ‘약간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이 설명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일치

혹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매우 자랑스럽다’ 혹은 ‘약간 자랑스럽다’를 선택한 경우에 1의 값을, 다른 두 개의 답을 선택한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는 더미 변수를 구성하여 경험적 검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4>에 있는 것과 같은 7개의 문항에 주목하였다. 이들 문항은 정치심리학의 연구에서 기존 사회의 질서와 전통,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변화에 저항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의미하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하상응·이보미 2017; Altemeyer 1996)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문항들이다. 비록 이와 같은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시민의 다수제-합의제 가치체계를 온전히 표현해 내지는 못할지라도, 일정한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이고, 그러한 권위의 행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은 그것이 설령 과반수를 살짝 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가치체계와 보다 잘 선택적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는 다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들일수록 이 7개의 문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고, 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들일수록 역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127.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 반대	상당 히 반대	약간 반대	반대 도 찬성 도 아님	약간 찬성	상당 히 찬성	전적 찬성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oding: 권위태도1 ~ 권위태도7	-1		0		+1		

〈그림4〉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독립변수 1:

권위에 대한 태도

이렇게 구성된 권위에 대한 태도 변수(들) 역시 조작화 자체에 근거하여 액면 타당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는 본격적인 다변인 분석에 앞서, 권위에 대한 태도 변수가 민주주의 자부심이라는 변수와 관련하여 기대한 것과 같은 효과, 즉 구성 타당도를 보이는지를 양자분석을 통해 우선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6>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6> 권위에 대한 태도와 민주주의의 자부심: 양자관계

	권위태도 값:		
	-1	0	+1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41.0 (293)	51.1 (186)	54.0 (557)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40.9 (455)	53.5 (217)	58.8 (364)
3)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42.8 (584)	55.7 (185)	60.9 (266)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40.8 (380)	57.4 (216)	54.0 (439)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41.8 (510)	52.2 (201)	61.1 (324)
6)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35.0 (320)	54.8 (241)	57.4 (474)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41.4 (514)	49.3 (211)	64.2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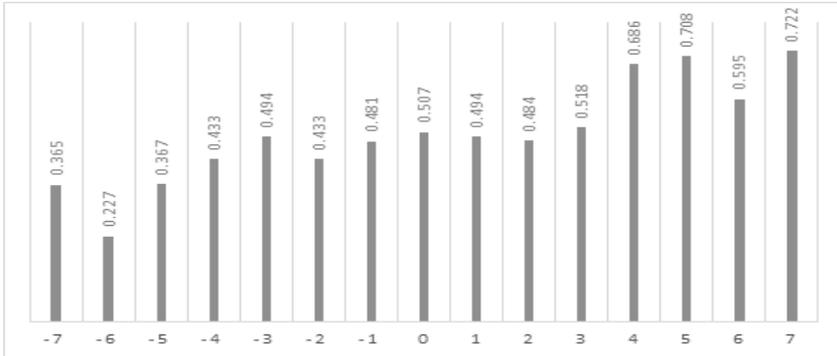
주: 셀 안의 수는 괄호 안에 포함된 응답자 집단(n) 중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응답자의 비율(%)

표는 우파 권위주의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각각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권위태도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1)을 보일수록 부정적인 입장(-1)을 보이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⁴⁾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다수제 민주주의의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이전의 결과(강신구 2012)와 유사하게,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자부심보다 클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다수제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일정 정도 보여주는 대체 변인(proxy variable)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다변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이들 7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통합지수(composite index)로서 **권위태도종합**이라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방식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변수는 -7부터 7까지 15점 척도를 가지게 되며, 다음의 <그림5>는 통합지수의 각 측정값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4) 4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권위태도 값이 -1에서 0, +1로 옮겨갈수록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 수평축은 권위태도종합, 수직축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응답자의 비율(density)

〈그림5〉 권위태도종합과 민주주의 자부심

그림은 통합지수로서 권위태도종합 값이 커질수록, 즉 우파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는 경향성이 대체로 커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권위태도종합 값 -6, 6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관계는 아주 단선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의 권위태도종합 지수가 너무 세밀한 분류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권위태도종합 지수를 좀 더 단순화하여, 권위태도 종합값이 -7부터 -3인 응답자(35.4 퍼센트)에 대해서 -1, -2부터 +2인 응답자(34.1 퍼센트)에 대해서 0,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터 +7의 값을 갖는 응답자(30.5 퍼센트)에 대해서 +1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응답자를 그 비율에 따라 대체적으로 삼등분하는 새로운 변수, **new 권위태도**라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7>은 이렇게 새로이 구성된 변수와 민주주의 자부심 사이의 양자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7> new권위태도 변수와 민주주의 자부심의 양자관계

	new권위태도 변수값:			계
	-1	0	1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한 응답자의 비율(%)	38.8	48.2	64.4	49.8
응답자 수(n)	366	353	315	1,034

이상의 <표6>, <그림5>, <표7>은 모두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 수록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경향성이 커진다는 것을 양자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세 개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들 세 개의 분석이 변수의 가공법만을 달리한 것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전에 변수를 구성하는 데 출발점이 되었던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연관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새로운 발견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그 자체에만 한정해서 보면, 개인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다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다수제 민주주의인 한국에서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그렇지 않은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크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함의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양자분석에서 발견되는 연관성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여전히 발견되는지, 다변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변인 분석에는 성별(여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계경제 만족도, 정치적 대화,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만족도 등의 변수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다음의 <표8>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⁵⁾ 표에 제시되어 있는

15) 교육수준은 초졸(1), 고졸(2), 대재졸(3), 대학원 재학 이상(4)로 구분되는 4점 척도, 가계소득은 월가소득 200만원 단위로 구분한 4점 척도, 가계경제 만족도는 “귀택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할 수 있는 문항

두 개의 모형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다 단순하게 통합한 두 개의 변수(권위태도종합, new권위태도)를 각각 프로빗 모형의 분석에 포함하여 민주주의 자부심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서, 두 모형 모두에서 응답자의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변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 비교하여 더 큰 자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가치체계 중에서 다수제 가치체계와 보다 잘 선택적으로 연관된다고, 즉 상관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의 만족감보다 크다는 이론적 가설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은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정치적 대화는 마찬가지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정치적 관심도를 대체하기 위한 변수로서,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2016년 실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족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현 정권이 국정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거나 또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8〉 민주주의 자부심에 대한 다변인 프로빗 분석

	Model 1	Model 2
여성	0.046 (0.086)	0.043 (0.086)
연령	0.001 (0.003)	0.001 (0.003)
교육수준	0.001 (0.069)	-0.004 (0.069)
가계소득	-0.138** (0.046)	-0.136** (0.046)
가계경제 만족도	0.092* (0.040)	0.089* (0.040)
정치적 대화	0.085† (0.051)	0.088† (0.051)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만족도	0.329*** (0.046)	0.340*** (0.046)
권위태도종합(-7~+7)	0.029** (0.011)	
new권위태도(-1/0/1)		0.123* (0.057)
상수	-0.957** (0.317)	-0.987*** (0.316)
응답자 수	939	939
Log-likelihood	-587.456	-588.703

주: 민주주의 자부심(0/1)에 대한 프로빗 모형추정의 결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p<0.001

V. 글을 맺으며

이 글은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합의제 가치체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두 개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제8차 유럽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가치관의 상(像)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보다 합의제적인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 거주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역시 같은 해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다수제 민주주의의 속성이 강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연 경험적 분석의 독립변수가 이론적 가설의 독립변수인 다수제적 가치체계와 합의제적 가치체계의 차이를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본문의 분석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의제적 가치체계를 가진 시민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지고 삶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 동의를 표할 가능성이 크며,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앞서 제기했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설령 경험적 분석의 독립변수가 다수제·합의제 가치체계의 차이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일지라도, 본문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체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감 혹은 지지가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기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만족감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면, Foa and Mounk 2016, 2017; Inglehart 2016). 이러한 위기를 감지하며, 일부의 국가들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얻으려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다 근원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참고문헌

- 강신구. 2012.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3호, 39-66.
- 하상웅 · 이보미. 2017.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의 심리적 결정 요인들: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1호, 5-37.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66-81.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Reprinted in 1989)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ltemeyer, Robert.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and Doh Chull Shin. 2006. “Citizens, Democracy, and Markets.” In Russel J. Dalton and Doh Chull Shin. (Eds.) *Citizens, Democracy, and Markets Around the Pacific Rim: Congruence Theory and Political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7.
- Eckstein, Harry. 1966. *Division and Cohesion in Dem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ckstein, Harry. 1998. “Congruence Theory Explained.” In. Harry Eckstein, Frederic J. Fleron Jr., Erik P. Hoffmann, and William M. Reisinger. (Eds.) *Can Democracy Take Root in Post-Soviet Russia?: Explorations in State-Society Relation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3-34.
- Foa, Roberto S. and Yascha Mounk. 2016.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27(3): 5-17.
- Foa, Roberto S. and Yascha Mounk. 2017. “The Signs of De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28(1): 5-14.

- Inglehart, Ronald. 2016. "How Much Should We Worry?" *Journal of Democracy*. 27(3): 18-23.
- Kornberg, Allan, and Harold D. Clarke. 1994. "Beliefs about Democracy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tic Government: The Canadian Cas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537-63.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ollock III, Philip H. 2003. *The Essentials of Political Analysis*. Washington D.C.: CQ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자료 출처

- European Social Survey Round 8(2016). A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Consortium 제공. Available at <<https://www.europeansocialsurvey.org/data/>> (검색일: 2019/1/22.)
-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16.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제공. Available at <<http://kgss.skku.edu/>> (검색일: 2019/1/22.)

투고일: 2019.02.14. 심사일: 2019.03.25. 게재확정일: 2019.04.01.
--

Congruence between Institutions and Value System, and Its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Kang, Shin-Goo | Ajou University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empirical investigations on the theoretical hypothesis such that citizens with consensus value system in a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and citizens with majoritarian value system in a majoritarian model of democracy are likely to show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way democracy works than others in their own political systems. The analysis on the 8th European Social Survey(2016) and that on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2016) largely confirm the theoretical hypothesis. Although it is a still remaining question for further research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empirical analyses measure validly the differences in value system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model of democracy in theoretical hypothesis, the results clearly support the idea such that the congruence between institutions and value system affects systematically citize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Key Words | majoritarian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value system, congruence, satisfaction with democracy